

統一情勢分析 2000-01

陳水扁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와 한반도

2000. 5

신상진(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대만 총통선거 과정과 결과	3
1. 국민당의 분열	3
2. 지역갈등의 표출	5
3. ‘일국양제’ 통일방안 반대	6
4. 민진당의 대중정책 조정	9
III. 천수이볜 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12
1. 대만해협의 안정유지	12
2. 경제교류 확대 모색	14
IV. 중국의 반응과 양안관계 전망	16
1. 중국정부의 반응	16
2. 중·대만관계 전망	17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21
1.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21
2. 한반도에 미칠 영향	23
VI. 정책 건의	25

I. 문제제기

- 지난 3월 18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을 당 강령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진당 후보 천수이벤(陳水扁)이 집권 국민당 후보 련잔(連戰)과 무소속 후보 쑹추위(宋楚瑜)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되어, 5월 20일 대만 제10대 총통에 취임하였음.
- 천수이벤의 총통 취임으로 대만에서 50여년에 걸친 국민당의 통치가 종식되고 대만인에 의한 대만 통치시대가 개막되었음.
 -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 이후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해 왔고, 1975년 장제스 사망이후에는 장징궈(蔣經國)가 대만을 지배해 왔고, 1988년부터 리덩후이(李登輝)가 대만 총통에 재임해 왔음.
 - 대만 출신인 리덩후이는 장징궈에 의해 발탁된 인사라는 점에서, 리덩후이시대까지 대만은 외성인(外省人: 중국대륙 출신자)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된 후 대만내에서 독립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음.

- 미국은 ‘대만관계법’ 규정에 따라 대만의 안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 해협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

- 중·대만간 긴장 악화는 중·미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 통일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천수이볜 집권 이후 중·대만관계 발전 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중·대만관계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대만 총통선거 과정과 결과

○대만 총통선거에 집권 국민당의 쉐잔, 민진당의 천수이벤, 무소속 후보 쑹추위와 쉬신량(許信良) 그리고 대만신당의 리아오(李敖) 등 5명이 출마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인 끝에 천수이벤이 승리하였음.

○총통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천수이벤은 4,977,737표를 획득하여 전체 투표자의 39.3%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음.
- 쉐잔은 2,925,513표를 얻어 23.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음.
- 국민당을 이탈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쑹추위는 4,664,932표와 36.8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낙선하였음.
- 민진당을 탈당하여 출마한 쉬신량과 투표 직전 쑹추위 지지를 선언한 리아오는 각각 0.62%와 0.13%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음.

1. 국민당의 분열

○국민당 후보 쉐잔과 국민당을 이탈하여 독자 후보로 출마한 쑹추위의 득표율을 합치면 약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40%에 미치지 못한 지지율을 보인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당의 분열에서 찾을 수 있음.

- 집권 국민당의 분열은 리덩후이가 1998년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민선 대만성 성장이었던 쑹추위가 이에 반발하여 국민당내 비주류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리덩후이가 대만성 정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쑹추위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중국에게 대만이 중국의 23번째 성이라는 논리적 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음.

- 쑹추위는 전직 국민당 사무총장과 대만 역사상 최초의 민선 대만성 성장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총통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999년 7월 16일 독자 후보로 총통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음.
 - 반면 리덩후이 총통이 후계자로 지목한 쉰잔 부총통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여 10% 내외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음.

- 국민당은 1999년 8월 21일 당 대표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도를 보였던 쉰잔 부총통과 샤오완창(蕭萬長) 행정원장을 총통과 부총통 후보로 정식 선출하였음.

- 쉰잔 후보 진영과 쑹추위 진영은 총통선거과정에서 민진당 후보에 대항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데 진력함으로써 국민당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선거 막판까지 렌잔의 지지도가 담보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렌잔에 대한 리덩후이의 미온적인 지지태도도 국민당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였음.

○총통선거 이후 국민당은 선거과정에서 쑹추위와 천수이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해당 행위자들을 축출하고 당내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당기위원회에서 옌칭빠오(顏清標) 타이중현 의회의장과 린춘더(林春德) 입법의원 등 53명의 당원 자격을 박탈함.
- 리덩후이 국민당 주석은 당내외 압력에 굴복하여 당 주석직을 사임(3. 24)하고, 렌잔이 한시적으로 대리주석직을 맡음.
- 55명으로 구성된 국민당 개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당 주석을 당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당내 민주화 방안을 강구함.

○한편 쑹추위는 선거 패배 직후 총통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해 준 인사들과 국민당 이탈자들을 규합하여 친민당(People First Party)을 창당(3. 31)하였음.

2. 지역갈등의 표출

○본토인과 외성인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 지역갈등의 표출도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었음.

- 대만 주민의 80%를 넘는 본토인의 상당수가 대만독립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민진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1940년대 말 중국에서 이주해 온 외성인은 중국이 선호한 쑹추위에게 많은 지지를 보였음.
- 타이난, 까오슝, 핑둥 등 남부지역 유권자들은 천수이벤을 적극 지지한 반면,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가까운 진먼, 마주, 타이베이, 타오웬지역의 유권자들은 쑹추위를 선호하였음.
- 이처럼 선거가 지역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됨으로써, 막판까지 30%에 달하였던 상당부분의 부동표가 천수이벤 지지로 기울게 되었음.
- 한편, 1999년 9월 21일 대만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집권 국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8,000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12,000가구의 가옥을 전파시킨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난토우와 타이중 지역주민들은 국민당 후보에게 극도로 저조한 지지를 보였음.

3. '일국양제' 통일방안 반대

- 1999년 12월 20일 중국은 마카오 주권을 회복한 후 '일국양제' 방

식에 의한 전 중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통일공세를 강화해 왔음.

- 2000년 신년사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의 조기 통일을 강조하였음.
- 200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서도 ‘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을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음.

○대만 총통선거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총통후보들에게 무력수단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수용을 촉구하였음.

○특히 중국은 2000년 2월 21일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제하의 「통일백서」를 발간하여 대만에게 조속히 통일대화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음.

- 그 동안 중국은 대만의 분리독립과 외국세력의 대만문제 개입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으나, 「통일백서」에서 대만이 통일대화를 무기한 거부할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음.¹⁾

1) 「통일백서」 전문은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新聞辦公室, “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 <http://www.wenwei/shownews.cgi?newsid=yo02220700&itemno=7&category=t 00-02-22> 참조.

-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음.
- 이처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도높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대만 주민들이 중국정부에 대해 뿌리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의 대대만정책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쑹추위와 련잔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중국에게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온 천수이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쑹추위와 련잔은 중국의 후난성과 산시성 출신인 반면, 천수이볜의 본적지는 대만 타이난임.
- 양안관계에 대한 주요 총통후보의 정견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대만 주요 총통후보의 양안정책 구상

	양안관계 정의	평화유지 방안	경제무역정책
천수이벤	2개 국가간의 특수관계	대만과 중국관계의 전면적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대만은행 중국진출 제한 철폐, 戒急用忍정책 폐기, 국가안전 유지하 조건부 三通 실시 및 투자제한 조치 취소
렌잔	특수한 국가 대 국가관계	상호 호혜적 교류를 통한 적대관계 해소, 평화협약 체결	WTO 규정에 의거 三通 실시를 위한 협상 진행, 양안간 경제무역 특구 설치, 투자보장협정 체결
쑹추위	상대적 주권을 가진 준국제 관계	30년 기한의 상호 불가침 평화협약 체결	戒急用忍정책 폐지, 점진적 직항 실시, WTO 가입후 三通 즉각 실시

출처: 『交流』(臺灣海峽交流基金會), 第49期(2000. 2), p. 9; <http://2000.chinatimes.com.tw/decision2000/strait.htm>

4. 민진당의 대중정책 조정

○총통선거 돌입 이후 민진당이 대만독립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였던 것도 민진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1986년 9월 창당 이후 참여한 각종 선거에서 민진당은 20~40%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는 바, 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대만독립을 선거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음.

- 특히 1996년 대만 9대 총통선거에 대만독립을 주장하며 평밍민(彭明敏)이 민진당 후보로 출마하였을 당시 21.1%에 불과한 득표율을 보인 반면, 국민당의 리덩후이 후보는 5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음.

○ 천수이벤은 원래 대만독립을 주장해 왔으나, 선거전략상 대만독립 주장을 제기하지 않고 양안관계를 ‘두 개의 중국인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었음.

- 1999년 10월 발표한 『중국정책백서』에서는 중국과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지도자간 상호 방문과 대화를 제도화하고, ‘三通’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힘.

○ 이에 따라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될 경우에도 양안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많은 국민들이 천수이벤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됨.

○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된 후 민진당내 일부 온건파 인사들이 ‘대만독립공화국’ 수립 조항을 당강령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1997년 민진당 탈당자들에 의해 창당된 건국당의 리전웬(李鎮源)과 리성슌(李勝雄) 등 강경독립론자들이 건국당의 임무가 완성되었다면서 건국당을 탈당하였는 바, ‘대만독립공화국’ 건립을 주장하는 건국당의 당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Ⅲ. 천수이볜 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1. 대만해협의 안정유지

- 「21세기 중국정책 백서」에 민진당의 대중정책 방침이 잘 나타나 있는데, 민진당은 양안관계의 정상화를 대중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음.
- 천수이볜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할 의사가 없을 경우 독립선언, 국호변경, 양국론 개헌, 독립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5不입장’을 밝히고, 양안관계의 안정화를 ‘전민정부’(全民政府)의 대중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음.²⁾
- 이를 통해서 볼 때, 천수이볜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급진적 독립노선보다는 중국과의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천수이볜은 민진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국민당 소속의 전임 국방부장 탕페이(唐飛)를 행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거국 내각을 구성하였음.

2) ‘全民政府’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정부는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천수이볜은 자신의 정부를 국민을 지도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원형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대만의 경제계는 천수이볜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천수이볜은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나, ‘하나의 중국문제’를 의제로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임.

- 총통 취임사에서도 ‘하나의 중국문제’는 미래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부분의 대만주민들도 양안간 긴장고조를 바라지 않으나,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이 『통일백서』를 발표한 직후 실시(2. 23~26)한 대만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일국양제’ 방안을 지지한 응답자는 9.8%에 불과하였고, 78.8%가 반대하였음.³⁾
-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13.9%에 그쳤고, 45%의 응답자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39.4%는 ‘중국인이며 대만인’이라고 답하였음.⁴⁾

○ 요컨대, 천수이볜 정부는 중국에게 무력사용의 빌미를 주지 않기

3) “民衆對當前兩岸關係之看法結果摘要,” <http://www.mac.gov.tw/mlpolicy/pos/8903/po8903ch.htm>.

4) 위와 같음.

위해 노력할 것이나, ‘하나의 중국원칙’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

2. 경제교류 확대 모색

- 1987년 대만정부가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를 허용한 후 대만기업이 400억 달러가 넘는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양안간 연간 교역규모가 257억 달러에 달하여 대만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11%를 상회하고 있는 바, 대만 신정부는 양안간 경제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 천수이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과의 ‘三通’(通商, 通航, 通郵)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것임.
 - 천수이벤은 중국과 대만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양안간 ‘三通’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 총통선거 직후 대만 입법원은 대만의 진먼, 마주, 평후지역과 중국대륙과의 ‘小三通’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법안(離島開發建設條例)을 통과시켰음.
- 또한 대만 신정부는 1996년 이래 국민당 정부가 실시해 온 대대륙 투자제한조치(戒急用忍政策)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당 정부는 대대륙 투자금지분야, 집중심사분야, 투자허가분야를 규정하여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해 왔으나, 천수이벤 정부는 투자금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대중국 투

자유제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첨단기술분야의 대중국 투자 제한조치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5,000만 달러 이상의 대중국 투자제한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임.

IV. 중국의 반응과 양안관계 전망

1. 중국정부의 반응

- 민진당 후보가 대만의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된 후, 중국은 줄곧 대만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신지도자의 언행을 관찰한다”(聽其言觀其行)는 자세를 보여 왔음.
 - 천수이볜 총통 취임 직후 중국은 대만당국이 ‘양국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면 해협양안관계협회가 대만이 지정한 단체와 대화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人民日報』, 『解放軍報』, *China Daily* 등 당·군·정 기관지를 동원하여 대만에게 ‘四不’⁵⁾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文攻’(문장을 통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아울러 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광조우군구와 난징군구 소속의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만을 압박해 왔고, 미 제7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기경보기 구입을 시도하고 있음.⁶⁾

5) 중국이 대만에게 수용을 요구하는 ‘四不’ 입장은 ‘不臺獨’(대만독립 반대), ‘不兩國論’(양국론 반대), ‘不改國號’(국가명칭 변경 반대), ‘不搞公投入憲’(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반대) 등임.

6) 8억 달러를 지불하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구축함 1척이 2월초 대만해협을 경유하여 중국 해군기지에 입항하였는데, 이는 중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중

-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도록 요청하고, 대만의 신정부가 관계개선을 시도하고자 하는 유럽, 중남미, 아시아국가들에게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일국양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화교사회에 대해서도 대만독립 반대 여론을 고취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압력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내부 단결을 모색하려는 데 있음.
 - 최근 중국에서는 사교집단으로 규정된 기공수련단체 ‘파룬궁’ (法輪功)의 시위와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문제 등으로 사회안정과 단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

2. 중·대만관계 전망

- 상기 대만과 중국의 정책자세를 통해서 볼 때, ‘하나의 중국원칙’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양안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가장 큰 함정임.

이나, 중국과 대만은 제한적 ‘三通’과 대화재개를 통해 긴장완화를 시도할 것임.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도 양안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는 바,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문제에 대한 ‘三不’ 입장을 지속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을 방지하려 함.⁷⁾
-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수단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에게 대만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함.

○미국 의회는 대만을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만안보강화법안」을 통과(2. 1 하원 통과, 상원 계류중)시키고, 대만을 TMD에 포함시켜야 하며 중국에게 ‘영구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시 대만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대만이 명확하게 독립노선을 추구하지 않는 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7) 대만문제에 대한 ‘三不’원칙은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중시 표명된 것으로 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반대, 주권 국가 자격으로 대만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임.

-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미·일 등 서방 선진국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은 1999년부터 서부지역 대개발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및 대만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많은 대만자본이 진출해 있는 푸젠성 등 중국 동남부 지방세력이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을 바라지 않음.
- 중국과 대만간 경제교류 증가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홍콩주민들도 양안간 갈등 심화를 원하지 않음.

○ 대만 신정부가 국제무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외교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대만간 각축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 천수이볜은 취임사에서 ‘인권외교’와 ‘비정부조직 외교’를 통해 국제활동 공간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음.
- 튀슈롄(呂秀蓮) 부총통은 1991년부터 대만의 유엔가입운동을 지휘해 온 인사인 바, 대만의 유엔가입 시도가 강도높게 전개될 것임.

○ 중국과 대만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예상되는 바,⁸⁾ 가까운 시일내에 양안간 ‘三通’이 실현되게 될 것임.

- 현재까지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통상, 통항, 통신을 반대한다는 ‘三不政策’을 채택해 왔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과의 ‘三通’ 실시가 불가피함.
- 천수이볜 총통 당선자도 총통 경선과정에서 ‘三通’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왔음.

○ 1996년 이래 대만이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채택한 ‘戒急用忍’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안간 무역거래와 투자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보임.

- 1999년 11월까지 중국에 투자된 대만기업의 자본은 44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대만기업의 40% 이상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음.⁹⁾
- 양안간 누적 교역규모는 1,323억 달러에 달하며,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10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1999년에도 대만은 중국과 234억 8천만 달러를 교역하여 155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¹⁰⁾

8) 중국은 자신이 WTO에 가입한 뒤 대만이 국가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한 경제지역의 자격으로서 WTO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9) “發展兩岸關係，實現和平統一，”『文匯報』(香港)，2000. 1. 29.

10) <http://www.udnnews.com/Finance/Taiwan-China-Trade/323197.htm>.

V.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1.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 중·대만간 긴장 지속은 중·미, 중·일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중·러, 중·북간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동북아정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어 미국의 대중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대만의 TMD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며, 「대만안보강화법안」의 미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임.
 -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 판매가 증대될 것임.
- 중국을 미국의 ‘잠재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에서 대만문제로 인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고취되고 일본에서 역내 역할증대를 요구하는 보수 우익세력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간에는 경제적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

이나 정치·안보적 갈등이 지속될 것임.

- 특히 댜오위도(釣魚島) 영유권 문제와 과거사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 마찰이 지속될 것임.
-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의 중요한 해상 수송로인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관계 경색은 중·러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일·대만의 TMD 구축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중·러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 중·러는 미국이 추진하는 「탄도탄미사일금지조약」(ABM) 개정 노력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
-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신형 구축함, 수호이37 전투기 등 첨단 군사무기 도입을 확대할 것임.

○199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 발생 이후 중·북한간 안보협력관계가 강화된 바와 같이, 대만사태 악화로 인한 중·미관계 경색은 중·북한간 군사적 유대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 한반도에 미칠 영향

- 신총통 취임 후 대만은 대북한 접근정책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대만간 비정치적 관계개선이 기대됨.
 - 천수이벤 총통 당선자는 한국의 경남대와 용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친한파임.
 - 또한 그는 대만 민주화 투사로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많은 감명을 받은 지도자임.
 - 천수이벤은 자신의 정부를 ‘全民政府’로 지칭하고 있음.

- 중국은 대만의 대한국 접근정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의 정치·안보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과 전통우호관계 복원정책을 적극화할 것임.
 -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한·중간 정치·안보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대만의 국제고립 타개 시도를 봉쇄하려 할 것임.
 - 중국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임.
 - 북한도 중국과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위협과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임.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관계 불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한국에게 TMD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주한미군이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철군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은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으나, 중국의 대미·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북·미, 북·일관계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게 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중·미 불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서 남북한과 중, 미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4자회담에서는 4개국 전원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있음.

VI. 정책 건의

- 한국은 대만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중수교 이후 조성된 대만과의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의회차원의 외교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국민간 신뢰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연내 대만이 WTO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대만이 자동차 등 우리 상품의 중요한 수출기지라는 점에서 대만과의 교역 확대 방안을 모색함.

- 대만과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모색하되, 중국의 입장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한국은 중국측에게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함.

- 최근 중국이 북한과 관계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중국에 대해 안보·정치협력의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대만문제로 인한 중·미, 중·일간 갈등은 동북아 안보구도를 한·미·일 대 중·러·북한의 대결구도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바, 한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함.

-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주한미군을 지역안정유지 세력 보다는 중국견제 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큰 바, 한국은 미국과 협의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군 참관을 허용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갈등상황이 조성될 경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바, 한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대만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바,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평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한국이 북한을 안심시키면서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陳水扁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와 한반도

統一情勢分析 2000-01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527, FAX: 901-2543

인쇄일 2000년 5월 일

발행일 2000년 5월 일
